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72
----------	------

발의연월일 : 2021. 4. 22.

발 의 자 : 오기형 · 김승원 · 민형배  
소병철 · 송재호 · 윤영덕  
윤준병 · 이용우 · 이해식  
홍성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처분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326일에 이름.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지연은 조사대상사건의 적체심화 및 위반행위의 단속 지연으로 이어져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2018년 2월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처분권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도 관할 행정구역 내 소재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2조 및 제32조의3).

나. 시·도지사가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이미 개시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해야 함(안 제32조의4 신설).

다. 시·도지사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으로서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함(안 제34조의2 신설, 안 제43조제8항).

라.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등 6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벌금형 및 과징금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함(안 제35조, 제41조 및 제43조).

마. 시·도지사는 조사대상사건의 사회적·지역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44조제

4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호 중 “공정거래위원회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을 “사건처리절차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를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나”로,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를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가 그 관할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중복조사의 방지) ① 시·도지사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인, 해당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 신고내용의 요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이미 개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후단에 따라 조사의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조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 “(시정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을 “제6조의5제4항”으로,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으로,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을 “제14조의2제5항을”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시정권고)”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시·도지사의 시정권고) ①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을 위

만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의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지사”로 본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을 “제6조의5제4항, 제9조제1항”으로,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으로,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을 “제14조의2제5항을”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호”로,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를 “제2항제7호·제8호 또는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호”로, “같은 항 제2호”를 “제2항제9호”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를 “제2항제7호 또는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작성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7.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9.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제4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회적·지역적”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지사의 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시·도지사의 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u>공정거래위원회의</u> 조사에 대한 협조	3. ----- -----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u> -----
제5장 <u>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u>	제5장 <u>사건처리절차 등</u>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u>공정거래위원회의</u>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	① -----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u> -----

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맹사업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  
-----  
-----.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  
-----  
-----.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가맹본부 또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는 가맹지역본부가 그 관할 지  
역에 소재한 경우에 한하여 조  
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

-----

-----

-----

-----

-----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나-----

-----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

-----

-----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  
-----.  
제32조의4(중복조사의 방지) ①  
시·도지사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인, 해당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 신고내용의 요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이미 개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후단에 따라 조사의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조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① -----제6조의5제4항-----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

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4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제14조의2  
제5항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① -----  
-----  
-----  
-----

-----대통령령으  
로-----  
-----  
-----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제34조의2(시·도지사의 시정권고)

①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의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지사”로 본다.

제35조(과징금) ① -----

----제6조의5제4항, 제9조제1항

-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

-----

-----제14

조의2제5항을-----

-----

-----

-----

-----

-----

-----

-----.

-----

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④ (생략)

제41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1.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  
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  
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  
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가맹본부가 제  
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  
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 자료를 제출한 자
-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  
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  
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  
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  
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



요구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  
금을 직접 수령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  
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  
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  
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  
하여 작성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  
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  
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  
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  
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  
한 자
7.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p>③ 가맹본부의 임원이 <u>제1항제3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u>같은 항 제1호</u>, <u>제1호의2</u> 또는 <u>제2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u>제1항제3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u>같은 항 제2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u>같은 항 제1호</u> 또는 <u>제1호의2</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⑤ ~ ⑦ (생략)</p>	<p><u>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u></p> <p>9. <u>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u></p> <p>③ -----<u>제1항제1호</u>----- -----<u>제2항제7호·제8호</u> 또는 <u>제9호</u>----- ----- -----.</p> <p>④ ----- ----- -----<u>제1항제1호</u>----- ----- <u>제2항제9호</u>----- -----<u>제2항제7호</u> 또는 <u>제8호</u>----- -----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	---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정거래위원회</u>가 부과·징수한다.</p> <p>제44조(고발) ① ~ ③ (생략)</p> <p>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은 <u>사회적</u>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⑧ ----- -----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u>----- -----.</p> <p>제44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회적·지역적</u>----- ----- ----- -----.</p> <p>⑤·⑥ (현행과 같음)</p>
--	--